

조국 공동교섭단체 구성 '속도'

민주연합 시민사회도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합류기로 교섭단체 20석 요건 사실상 채워... 실무 준비 착수할 듯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사회 및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소수정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이르면 이달 중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 및 비례대표 2명 공개 오찬에서 시민회의 당선인 2명(김윤·서미화)이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제 정당으로 돌아가면 시민회의 당선인 2명은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시민회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로 전해졌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시민사회 당선인들이 나름 독자성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이어 "독자적인 교섭단체가 가진 장점이지 어찌어찌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위기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민중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도 "민주

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개혁을 견인하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고 말했다.

윤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교섭단체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합정치가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자 목표이고, 연합정치를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야권 군소정당이 사실상 연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12석)과 더불어민주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의 의석을 모두 더하면 20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 없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진입이 가능하다.

민주연합은 이달 중 해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연합 당선인들의 당적을 정리하는 작업

도 이달 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민주연합 해산과 동시에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이르면 이달 말 가동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체 협력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야권 당선인은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당 합당에 준하는 작업인 만큼 개혁 추진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 등 공통분모를 만드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연합정당이 구성되면 이에 맞선 여권 연합정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큰데, 국민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정치권 필수로 비치지 않겠다"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갈등 요인이 적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관영 도지사, 리얼미터 긍정평가지수 '전국 2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대상 조사 결과 민생 회복, 경제영토 확대에 진정성 보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대상 조사를 통해 리얼미터 긍정평가지수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3월 들어 상위 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룬 김관영 지사는 경북 이철우 지사를 앞지른 뒤 전남 김영록 지사와 차이를 좁혀가는 등 민선8기 전북 도정 전반에 대한 긍정 여론을 넓혀가고 있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긍정 평가는 66.2%로 전월 대비 1.2%p(전월 65.0%) 상승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67.5%)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가 전국 2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63.4%)과 8월(59.4%)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지수 일반지수가 상승한 것과 달리 3월 들어 전남 김영록 지사는 67.5%를 기록해 전월 대비 1.3%p 하락했고, 경북 이철우 지사는 64.0%로 전월 대비 2.8%p 하락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8기 전북

전북애향본부 행·재정 지원 지도·감독 강화

전용태 도의원, 개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시대를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과 도민의 내고향 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며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의식구조 개혁 등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 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 퍼포먼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임준(왼쪽, 네 번째)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7일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시청 제공)

도의회 농산경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섬유산업 재도약 견인' 애코융합섬유연구원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생생나눔 공동판매장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애코융합섬유연구원과 전주 덕진구에 소재한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 양성, 제품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애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전북의 섬유산업은 전북 지역 제조업 기업의 약 6%를 차지하며, 그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74%를 차지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구조이다"며, "전북의 섬유산업이



전통 섬유의 한계를 넘어 K-방산, 이차전지, 탄소섬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애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산업기술 개발, 확산, 기업 성장을 위한 융합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섬유패션클러스터

동 리모델링에 따른 여러 문제점 및 장비 활용 저조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연구원이 신속한 하자 보수 처리와 기업입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섬유산업 성장 발전의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도내 섬유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은 2015년에 개장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관측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 판매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운영주체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위탁업체인 한솔소비생활협동조합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동으로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비자 전환 찾아가는 설명회

전북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고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순창·장수 군청에서 '지역특화형비자(F-2R/F-4R)·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F-4R)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 및 동포 등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인구감소 지역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E-7-4)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등)를 대상으로 본국으로 출국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기업·도지사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설명회는 순창군과 장수군 기업 외국인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

지속 가능한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제도 보완

권요안 도의원 대표발의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안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농산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경제에 큰 혼란을 주



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랜시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형 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총선 패배 책임' 새미래 비상대책위원회 꾸리기로

이낙연 공동대표 "당 새로운 운영방식 찾기 위해 모든 당직자 사퇴... 위원장에 이석현 전 부의장 지명"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인파로 얼룩진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의원의

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회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습감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3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한데 이어 4월 17일로 최하위 단

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마지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충남) 이후 가끔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3월 22일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상황과 야생조류에서도 2월 6일 이후 미발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재훈 기자